

□ 2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요지

1. 일본 내각관방의 17세기 울릉도 도해어업 및 안용복 진술에 대한 주장 분석

발표자 : 홍정원(유민국제법연구소 연구원)

일본 정부의 영토 관련 홍보는 2013년 2월 출범한 내각관방(內閣官房)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領土主權對策企劃調整室)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내각관방은 독도 관련 홍보 영상 ‘에도(江戸) 시대의 울릉도와 안용복 진술([竹島研究・解説サイト PART1・2] 江戸時代の竹島と安龍福の供述)’ 1・2편을 공개했다. 이 홍보 영상은 2021년 8월 27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에 일본어로 게재된 데 이어, 2022년 4월 24일 영어, 9월 6일에는 한국어로도 게재했다.

이 홍보영상의 주요 주장은 첫째 17세기 돗토리번(鳥取藩)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받아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했고, 둘째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령」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체적으로 1950~60년대 한국과 일본의 「왕복외교문서」, 2008년 외무성(外務省)의 「竹島(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팜플렛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10 포인트」보다 「왕복외교문서」에 좀 더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은 앞으로도 독도 관련 홍보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 영상 처음에 “정부 위탁사업 하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이며 해당 내용이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이며, 향후 이 내용들을 정부 공식견해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1890년대 전후 울릉도 물산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대응과 해산회사

발표자 :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몰래 도항하여 섬 안의 산물을 채취하려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문을 보내어 일본인들의 불법 도항에 항의하고, 위반자의 조사와 단속을 요구하였다. 1883년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리고, 내무성(內務省) 관리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일본인들을 퇴거시켰다.

일본인 퇴거 조치 이후 1884년 12월 갑신정변 발발 이전까지 일본으로 반출된 울릉도 목재의 소유와 처분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김옥균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무역회사(America Trading Company)와 울릉도로 도항하여 벌목을 했던 일본인 업자 사이에 빚어진 소송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은 방청을 한 기자가 연재 기사로 상세히 그 동향을 보도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정기적인 수도관(搜討官) 파견, 울릉도 내 물산의 조선국 소유 등이 거론되었다.

1880년대 후반부터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 연해에 어선을 타고 진출한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조선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늘어났다. 조선 정부는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일본 측에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조선 정부는 선전관(宣傳官) 윤시병(尹始炳)을 울릉도검찰관(鬱陵島檢察官)으로 파견하였다. 윤시병은 당시 미역을 정부로 상납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는데, 이때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울릉도민 중 한 명이 배계주(裴季周)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배계주가 초대 울도군수로 임명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왕 고종의 측근 윤시병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무렵 새로운 어업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인까지 고용하면서 연안 어업에서 이익을 도모하려 한 해산회사(海産會社)가 등장하였다. 회사 운영에는 조선 정부의 전 현직 관리들이 깊숙이 관여하였다. 이 회사는 동남 연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려고 외국 선박과 선원을 고용하였고, 울릉도 전북 채취에서 일본인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회사의 활동 반경이었던 동남 지역은 울릉도와 제주도, 동해안과 남해안을 포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해산회사를 철폐하였다. 이 회사는 1890년대 전후 시기 조선 정부가 울릉도 개발과 연해 어업에 관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3.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문제

발표자 : 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 글은 신한일어업협정(新韓日漁業協定,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후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999년 1월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양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을 강화했다.

본문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중심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문제를 정책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한다. 첫째,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경위와 해양정책에 관한 것이다. 1996년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관련하여 국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998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에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기본법 발효 이후 일본은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각관방 주도로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수산청과 외무성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수산청은 독도 주변을 ‘우량어장’으로 인식하고 해당 해역에서 수산자원 확보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반면 외무성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셋째, 시마네현(島根県)과 돗토리현(鳥取県)의 지역구 의원과 어민들의 인식에 관한 것이다. 어업문제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사회, 어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지자체 간의 인식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 어장에 대하여 어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돗토리현은 한국 어선의 어업을 제한하였으나 한일관계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로 동아시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어업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안 지역의 어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한일 간 어업문제와 독도 영유권은 국가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환경과 지역사회, 어민, 어업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4. 시마네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 어업권의 정치화 -

발표자 : 박창건(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죽도(竹島)의 날’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원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는 1994년 UN해양법협약 발효의 시점부터 2005년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조례가 제정된 전후의 시기로 한정하여 어업문제에서 영유권 문제로 전이된 한일 관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마네현의 ‘죽도’ 문제는 독도 주변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이 ‘죽도’ 영유권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책의 궤도를 수정하게 된 근거는 한일 어업 레짐의 변화, 어획량 규제 도입, 지역 NGOs 단체의 영향력 확대 등 같은 제도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어업 문제였다. 일본 근해어업, 특히 시마네현의 어획량은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어 생존권을 해결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의 잠정수역에서도 안전한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유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 논리적 근거는 어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죽도’ 영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어장 확보를 통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유권 문제라기보다는 어업 문제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